

논단



- 1 중소기업체의 금융지원 방안
- 2 미래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중소건설업체의 금융지원 방안

김명수 |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를 통해 패러다임의 혁신의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창조경제의 주역임을 강조하고 중소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한 각종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및 개발된 기술의 활용 등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건설산업은 지금까지 이들 모두에 관심이 적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정부의 정책금융지원제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적었음은 물론 중소기업도 물량배분을 통한 수주에만 매달려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고 금융지원 등에는 관심

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장기침체의 구조적인 불황기에 직면한 건설산업은 근본적인 산업재편 등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융합이나 신기술, 기술융합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어 신시장 및 신사업 모델을 창조하는 혁신 코드가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력과 시장개척력 등 시장 경쟁력과 효율성에 입각하여 자생력 있는 업체를 중점 지원하는 방향의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에서는 과거와 달리 제도에 의한 중소기업 보호책이 아닌 미래 성장을 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창의적 혁

〈표 1〉 창조경제 전략과 건설산업 시사점

| | |
|---------------------|---|
| 창조경제 주요 내용 | 건설산업 활동 방향 시사점 |
| 창의적 지적재산의 활용 | 건설 R&D 성과물과 특허, 신기술 등을 현장 적용 가속화 |
| 신시장 진출 | 해외시장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에서의 신성장 동력 발굴 |
| 민간투자 활성화 / 규제 개선 | 정부 재정 부족 등으로 민간 투자사업 등 민관 협력 사업 확대와 투자 유인 제공 및 관련 규제 개선 건의 |
| 첨단기술/ ICT기술 도입 및 활용 | 첨단 건설 자재, 공법, 기술, 재해 재난, 에너지, 친환경 기술, 정보화 기술 등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 |
| 중견 중소기업의 성장 | 대중소 상생, 원하도급 관계 등 산업 생태계의 불합리점 해소 등 |

신은 위기에 처한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최상의 방안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설산업도 경제성장의 엔진이 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창조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창조경제가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강조하는 면이 강하므로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측면에서는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지원 실태와 문제점을 간략하게 파악한 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중소기업 지원 실태와 문제점

1) 건설경기 침체와 중소기업 지원 실태

건설산업은 2000년대 들어 장기적인 침체

국면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2014년에 약간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과거와 같은 큰 폭의 경기상승은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또 가까운 장래에 이런 침체국면을 벗어날 새로운 성장 동력도 찾기 힘든 실정이다. 아울러, 저성장과 이에 따른 경쟁 심화로 인해 건설기업들의 수익성도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은 2013년 매출액 영업이익이 1.65%로 제조업 5.2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건설산업 내부에서도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율은 2.67%로 중소기업 4.40%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건설시장의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해외건설시장은 사업조건이나 공사기간 등의 이유로 창의적 기술 적용이나 산업간 융합사례 등 창의적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긍정적 측면¹⁾도

〈표 2〉 건설업체 수익률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 구분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평균 | |
|------------------|-----|-------|-------|-------|-------|-------|------|------|
| 매출액 영업 이익률 | 건설업 | 전체 | 3.82 | 2.64 | 2.49 | 1.96 | 1.65 | 2.51 |
| | | 중소기업 | 3.43 | 2.55 | 2.55 | 2.70 | 2.87 | 2.82 |
| | | 대기업 | 4.35 | 2.76 | 2.40 | 0.98 | 0.22 | 2.14 |
| | 제조업 | 전체 | 5.83 | 6.72 | 5.57 | 5.13 | 5.25 | 5.70 |
| | | 중소기업 | 4.49 | 4.53 | 4.21 | 4.31 | 4.40 | 4.39 |
| | | 대기업 | 6.43 | 7.67 | 6.13 | 5.43 | 5.57 | 6.25 |

*출처: 한국은행, 2013 기업경영분석

1) 예를 들면, 모듈화 공법, 첨단 정보화 기반 설계 및 관리 기술 등

〈표 3〉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현황

(단위: 억달러, %)

| 구분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합계 | 금액 | 476.4 | 491.5 | 715.8 | 591.4 | 648.8 | 652.1 |
| | 비율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 증가율 | 19.73% | 3.17% | 45.64% | -17.38% | 9.71% | 0.51% |
| 대기업 | 금액 | 413.1 | 451.6 | 668.7 | 543.2 | 614.8 | 616.1 |
| | 비율 | 86.71% | 91.88% | 93.42% | 91.85% | 94.76% | 94.48% |
| | 증가율 | 21.97% | 9.32% | 48.07% | -18.77% | 13.18% | 0.21% |
| 중소기업 | 금액 | 63.3 | 39.9 | 47.1 | 48.2 | 34 | 36 |
| | 비율 | 13.29% | 8.12% | 6.58% | 8.15% | 5.24% | 5.52% |
| | 증가율 | 6.93% | -36.97% | 18.05% | 2.34% | -29.46% | 5.88% |

※주: 1) 연도별 비중(%)
2) 연평균 기준

있다. 하지만 최근 해외시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실패 등으로 인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도 노정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해외시장 진출도 여의치 않은 실정으로 수주규모도 전체의 10%미만으로 나타난다. 대기업이 진출할 때 협력업체로 현지 업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실정에 맞는 기술력이나 공사관리력 등을 갖추는 데 한계가 많아, 노력에 비해 큰 성과도 없이 다년간 침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주요 대형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 수주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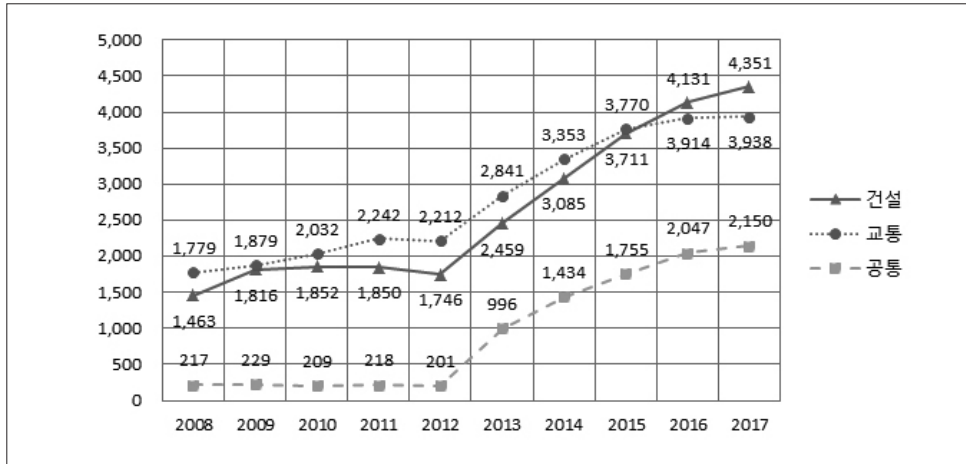
중소건설기업은 국내시장에서 제도적 보호장치에 의존하여 성장한 측면이 강하여 창의적 기술력 등으로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타 산업에서 강

한 중소기업(강소기업)의 저변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건설산업에서도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신시장 개척과 이에 필요한 신기술 연구개발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R&D예산은 4% 정도로 매우 취약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없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R&D 예산 가운데 90% 이상은 대기업, 출연(연) 등과 공동/위탁연구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기술기반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의 사업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예산지원도 미미한 실정이다. 2013년 국토교통 연구개발 예산은 6,095억원에 이르지만 중소기업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분야 예산은

〈그림 1〉 건설교통분야 R&D 예산추이



30.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창조경제에서는 시장에서 성장잠재력과 혁신역량이 있는 업체를 발굴하고 성장을 견인하는 금융지원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금융지원은 첨단기술 및 국가의 신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융자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술 혁신의 생태계를 위해 기술이나 사업모델을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풍부한 자금지원 여건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창조경제 지원 모드에서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의 근본이 되는 기술/사업 혁신역

량이나 시장개척역량을 강화시키려는 의지나 동기부여가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중소기업은 매출, 수익성, 자금흐름 등 경영지표들은 업종 비교에서 거의 최하위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처럼 해외수주나 신사업개척역량도 부족하여 과다한 퇴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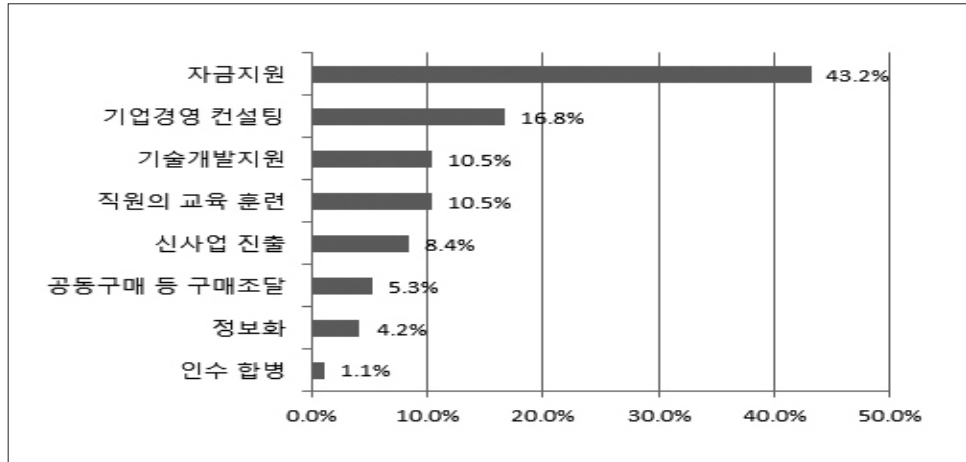
시장에서의 퇴출 압력은 중소기업체들에게 집중되는데 이 과정에서 적자수주 등 출혈경쟁과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우량 중소기업마저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중소기업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아닌 시

〈표 4〉 기술사업화 예산 및 과제 수

| 구 분 | 2010 | | 2011 | | 2012 | | 2013 | |
|-------|-------|-----|-------|-----|-------|-----|-------|-----|
| | 지원예산 | 과제수 | 지원예산 | 과제수 | 지원예산 | 과제수 | 지원예산 | 과제수 |
| 기술사업화 | 29.9억 | 11개 | 41.0억 | 14개 | 40.0억 | 4개 | 30.6억 | 4개 |

※ 출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그림 2〉 중소기업체의 지원희망분야



※출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2), 중소기업체 경영 실태 분석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장경쟁원리에 입각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즉, 경쟁력이 없는 업체의 퇴출은 시장에 맡기되 산업의 저변확충을 위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2012)에 따르면, 여러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체에 대한 최우선 지원 희망 분야는 자금지원 분야로 나타난다.

2)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문제점

중소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적절한 자금 공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선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지원의 제도적 수혜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기술

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정책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종에 대하여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융자제의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에서 배제함에 따라 중소기업체들 중 우수기술이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 기업들도 지원이 원천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 정부는 담보력이 미약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 및 기술보증 등 보증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신용보증에서 담보력이나 신인도 열위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기술보증의 경우도 건설업체들의 인식 부족과 건설업을 위한 기술평가 체계 미비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로, 정부는 기술기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금융 분야 지원책²⁾을 수립하여 모태펀드

등을 통한 투자 지원 정책을 실행 중에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연구(2008)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책은 융자 보증 등 간접금융방식보다는 직접투자 방식이 성장경인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³⁾ 융자 보증 등의 간접금융은 담보력이나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므로 성장초기의 기업보다는 성장 후기 기업에 자금이 지원되어 당초의 지원 취지와 모순된다는 비판이 많다.

우리나라도 정책금융의 간접금융 편중 현상을 시정하고 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모태펀드 등을 통한 벤처투자를 늘려왔으며, 현 정부 창조경제 기조에 따라 대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이 부분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2005년 이후 매년 40개 이상의 투자조합이 결성되고 있으나 건설업에 대

한 투자조합 결성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는 먼저 건설산업이 공공발주에 의존하는 수주산업으로 선급금 등을 받으므로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오해 때문이다. 또 건설업도 기술발전에 의한 공사원가 절감 및 국민생활 개선 등 기술개선의 효과와 필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산업이 아니라는 막연한 인식도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건설업계와 관련 기관들도 기술성이나 사업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분야에 대한 연구와 지원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홍보 등의 자체 노력도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표 5〉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 구분 | 생산유발계수 | 부가가치유발계수 | 취업계수(명/10억) |
|-------|--------|----------|-------------|
| 농림 어업 | 1.860 | 0.821 | 37.3 |
| 광업 | 1.684 | 0.822 | 7.8 |
| 제조업 | 2.071 | 0.590 | 9.3 |
| 건설업 | 2.104 | 0.749 | 13.7 |
| 서비스업 | 1.733 | 0.826 | 16.6 |
| 산업 평균 | 1.948 | 0.686 | 12.9 |

출처: 한국은행, 2010년 산업연관표 작성결과, 2012

2)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4.7.7)」 및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04.12.24)」 수립,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04.12.31)

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12), 「기술금융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2.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 제도 개선

1) 건설업에 대한 막연한 차별 인식 개선

제한된 정책자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제조업을 우선하고 타 업종을 차별하는 인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각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유발 효과, 고용유발 효과를 발표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104로 전 산업에서 가장 높으며, 부가가치 유발계수나 취업계수도 제조업보다 높게 나타난다. 건설산업은 이처럼 높은 산업연관효과를 통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큼은 물론, 광범위한 분야에서 기술, 자재, 장비 등의 혁신과 사회 인프라 구축 및 환경개선 등 국민 생활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최근의 기술 융복합과 산업간 컨버전시 등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산업 연관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설산업을 제조업과 차별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2) 우수한 중소기업사는 모두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① 건강진단 등을 통해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된 중소기업사

현행 중소기업 지원 제도는 취지상 중소기업 중 역량이 우수하나 금융권의 리스크 회피 성향으로 인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코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술 및 혁신 능력 등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담보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을 선별 지원하는 노력을 통하여 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고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시스템’ 제도를 도입 및 운영을 함으로써 기업의 현안 사항과 역량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정 기업 선별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원효과의 극대화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용자제외 대상업종으로 규정하며, 건강진단 대상에서도 제

〈표 6〉 생산주체별 자금지원 현황

| 공정 | 설계 | 자재생산 및 가공 | 시공 |
|-----------|------------------------------------|------------------------------------|--------------------------------------|
| 업 종 | · 건축 설계 · 토목 엔지니어링 · 도시 설계 등 | · 철근 제조및가공 · 시멘트 제조 · 레미콘 제조 | · 아파트 건설업 · 산업플랜트 건설업 · 도로 건설업 |
| 정책자금 지원대상 | ○ | ○ | × |

〈표 7〉 신기술 지정/ 활용 현황 (2010-2012)

(단위: 건수, 억원)

| 구분 | | 2010 | 2011 | 2012 |
|----|------|--------|--------|--------|
| 지정 | 신청 | 51 | 73 | 81 |
| | 지정 | 21 | 23 | 38 |
| 활용 | 활용건수 | 2,488억 | 1,839억 | 1,521억 |
| | 매출액 | 6,543억 | 5,083억 | 4,309억 |

출처: 건설신기술협회

외하는 것은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것이다. 현재 산업 플랜트 등 극히 일부의 분야에만 건설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건강진단제도에 의해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②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중소건설사

건설산업은 철근콘크리트·기계설비·정보통신 시스템 등 20~30여개 공정이 상호 복합하거나 융합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기술개량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업종이다. 건설업은 30,000여 자재(부품)를 가공, 제작, 설치하는 복합기술이 적용되며, IT기술을 융합한 Intelligent Building, Smarthighway 등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업종이다. 아울러, 건설산업은 주택·도로 등 다양한 시공기술을 개량하여 생산성 향

상과 원가절감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으며 국민생활의 질의 향상에도 기여도가 높다.

건설산업은 IT·GT 등 기술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적기에 기술개발이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즉, 건설산업은 설계·시공·자재업체가 상호보완 작용을 통하여 시설물을 완성하는 것으로, 설계·자재업체만 정부지원을 통하여 기술력을 높인다 해도 시공업체 기술력이 떨어지면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균형 있는 정부 지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건설업체도 자체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인증 받는 신기술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영세한데도 불구하고 전체 신기술인증의 75%를 차지하고 있다.⁴⁾ 반면, 정부지원이 미흡하고, 건설사 자체적으로 기술을 활용하다 보니 활용도가 낮아지고 애써 개발된 기술이 사장화되고 있다.

건설산업은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국내수출 3위, 국가산업의 기반을 제공하는 기초산업이다. 특히, 최근 건축, 토목 분야에서 해외

4) 2012 건설신기술협회

수주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중소 건설업체를 육성하여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12년 건설업종은 전기전자, 자동차에 이어 해외수출 3위(648억\$)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건설은 대표적인 전문기술 융복합 산업으로 기술개발,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부구조를 이루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건설업 전체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특히 더 필요하다. 따라서 별도의 평가를 거쳐 기술력이⁵⁾ 검증되거나 기술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3. 중소기업사의 기술보증 활용도 제고

1) 건설산업 특성을 기술평가에 반영

기술보증기금은 평가목적 및 용도에 따라 활용 가능한 기술평가모형을 지속 추가함으로써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으며 기술과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의료, 관광 등 서비스 시장개방(FTA체결)과 e-learning 등 민간교육산업 성장에 따른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평가 수요 증가 예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의료, 교육 서비스 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또, 기술간, 사업 간의 융합이 기술혁신의 신 패러다임으로 부각됨에 따라 기술 융복

〈표 8〉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모형의 종류

| 종류 | 세부기술평가모형 |
|--------------------------------|--|
| KTRS | 일반제조, 바이오, 환경, SW, 닷컴, 디자인, 융복합 |
| KTRS-Start up | 일반제조, 바이오, 환경, SW, 닷컴, 디자인, 융복합 |
| BM평가보고서 | 모든 업종 |
| R&D평가모형(2개 분야) | R&D기업평가용, R&D과제평가용 |
| 청년창업기업평가모형 | 모든 업종 |
| 1인 창조기업평가모형(2개 분야) | 기술기반기업, 지식기반기업 |
| 혁신형 지식서비스업평가모형(창업/비창업 각 6개 분야) | 연구개발(공학), 연구개발(인문), 광고물작성, 보안시스템, 의료, 교육 |
| 문화콘텐츠평가모형(11개 장르) | 극장영화, 드라마,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방송`애니, 뮤지컬, 캐릭터, 기타게임, 기타영화/애니메이션, 기타공연, 음악 |
| 녹색기술평가모형(3개 분야) | 에너지원 기술, 고효율화 기술, 친환경생산 및 사후처리 기술 |

5) 신기술인증, R&D실적, 특허, 기술가치 평가 등 객관적인 선별 과정 검토 필요

합 지원 확대를 위한 평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융복합 기술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기타 녹색기술 및 산업특성을 반영한 녹색기술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총 9개 모형, 46개 분야의 기술평가 모형을 구축한 바 있다. 아울러, 당초 단일 업종 모형이던 기술평가시스템을 7개 업종⁶⁾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건축, 토목 등 건설 분야에 대한 평가모형은 검토된 바 없다. 따라서 중소건설사의 기술보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평가모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건설업계의 기술보증 활용 확대 노력

현행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신청 자격은 업종 제한이 없으며 신기술 사업(적용대상이 광범위함)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건설업체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신기술을 지정받은 경우 신기술지정기간 동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상품 중 ‘기업일반자금 보증(기술보증)’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술 중소기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용자를 보증하는 제도이다. 신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면 모두 가능한데, 여기서 신기술에 대한 규정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종도 기술평가를 통한 보증이 활성화되도록 업계 차원의 확

대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활용하면 협약 은행의 용자지원 외에도 이노비즈나 벤처인증 등 추가적인 우대지원을 받는 데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건설업 내에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는 현장기술 항목 발굴 노력 등을 통해 기술보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보증기금의 건설업에 대한 기술평가가 활성화되면 건설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대상 기술 분야를 구체화하고, 향후 건설산업 특성에 맞는 기술금융을 위한 기술평가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중소건설업 투자금융 지원 방안

1) 투자금융 시장 현황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융자, 보증 등 부채 시스템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서 기술기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자금이 공급되지 않는 낙후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기술기반 사업화를 희망하는 초기 기업 지원을 위해 투자 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는 창조금융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창조금융은 벤처기업 금융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정책펀드를 기반으로 한 벤처캐피탈을 통

6) 일반제조, 바이오, 환경, SW, 닷컴, 디자인, 융복합

〈표 9〉 기관별 벤처펀드 조성 사례

| 구분 | 투자자금 | 투자분야 | 조성재원 | 운영기관(전담인력) |
|-------|--------------------------|------------------------|-------------------|----------------|
| 재정 투입 | 중소기업모태펀드 (중기청, 2005년~) | 중소·벤처기업 (창업초기, 문화, 특허) | 16,216억원 (2013년말) | 한국벤처투자 (28명) |
| | 신성장동력펀드 (지경부, 2009년) | 신성장동력 (중소, 중견) | 1,500억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명) |
| 민간 조달 | 농식품투자모태펀드 (농수산부, 2010년~) | 농식품, 수산업 | 4,200억원 (2013년말) | 농업정책자금관리단 (6명) |
| | 정책금융공사 (금융위, 2010년) | 성장 및 회수 | 28,050억원 | 정책금융공사 (3명) |

한 직접금융 지원방식이며, 둘째는 기술평가 인중에 따른 공공신용보증 및 직간접 대출 지원을 통한 간접금융 방식이다. 용자 보증 등의 간접금융은 담보력이나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므로 실적이 없는 성장초기의 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이 이루어지려면 기술평가를 감안한 기술등급 평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⁷⁾

시장에서 성장잠재력과 생존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발굴하고 성장을 견인하는 데는 벤처펀드 방식의 금융 지원이 현실적이며, 민간 투자를 연결하는 등 재원조성이 용이하고 벤처캐피탈사의 투자관리 등으로 성장초기 기업의 발굴과 적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3년 ‘벤처창업 자금 선순환 생태계 방안’을 발표하고, 3년간 총 6조원의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정부 내 각 부처들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

민간자금과 함께 투자조합을 조성·운용 중이다. 정부는 2005년에 그 이전부터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던 문화관광부,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의 벤처펀드의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모태펀드로 일원화하여 한국벤처투자가 관리하게 하였다.

또, 농식품부는 별도로 모태펀드를 결성하여 농업정책자금 관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기관 재원으로 별도 자체관리 펀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공사를 통하여 중소, 벤처 업체에 대한 투자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모태펀드와 여타 정책펀드 등의 자금 기반에 민간 자금이 연계되어 벤처캐피탈이 투자할 수 있는 총 투자재원은 2013년 10조 대에 이르고 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잔액은 4조를 초과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⁸⁾

그러나 우수한 신기술이나 기술개발을 토대로 사업화를 추진코자 하는 중소기업은 업

7) 2014. 하반기부터 금융위원회는 기술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정착에는 시간이 필요함

8) 벤처캐피탈 협회

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하여 투자금융 시장에서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2) 중소기업사를 위한 펀드 조성실태

건설업도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며 IT·GT 등 기술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적기에 기술개발이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산업이다. 건설기업들도 신기술인증, 국가주도 R&D참여, 특허획득, 기술가치 평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술개발과 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한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기술개발 분야에서 특히 중소기업사의 비중이 높고⁹⁾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시도도 많으나, 기술사업화를 위한 정부지원은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투자금융 시장에서는 건설업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서 중소기업의 우량 기술이 상당수 사장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펀드 조성을 통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창조경제의 패러다임 속에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해주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모태펀드 조성, TCB를 이용한 IP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지원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업을 위한 정책은 물량배분에 근간을 두고 있었고, 중소기업들도 수주에 집착하여 기술개발이나 금융지원 등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정책금융에서 혜택을 중소기업체들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및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의 국민경제에서의 위상을 생각하면 사업성이 우수하고 기술성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건설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기술가치 평가모형의 개발을 통해 기술보증은 물론 금융에 대한 활용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태펀드 조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기반을 확보하여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도 경제성장의 엔진이 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창조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창조경제가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강조하는 면이 강하므로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측면에서는 더욱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9) 건설신기술 인증 건수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60%에 달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3년말 기준)